# ‘교육기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로 2차 피해 예방

**광주지검 6개월 간 1600개 의뢰**
**본지 첫 보도 ‘보수업체 직원’도**
**‘노예계약 청소년 성착취물’ 차단**
**피해자 국선변호사·심리 치료도**

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2022년10월11일자 1면 등)한 20대 시설 관리업체 직원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불법 촬영물 1600여 개(피해자 160명)를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검찰은 학교에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치맛 속이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안과 관련해 실명 송치된 피해자들을 전부 가명 처리하고, 불법촬영물 85개를 삭제·차단 의뢰했다. 또 인적사항 미특정으로 진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총 69명의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았다.

검찰은 성인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21명을 대상으로 109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다. 송치 당시 미특정된 피해자 인적사항은 보완수사요구로 추가 확인한 후, 피해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었다. 또 학원 원장, 교사 등이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 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전체 불법촬영물 123개(피해자 39명)를 삭제·차단 의뢰했다. 촬영물의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고려, 심리 치료도 지원했다.

아울러 성인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청소년을 간음하는 영상을 제작한 사안과 관련,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그루밍 성범죄임을 인지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엄단하고, 불법촬영물 119개를 삭제·차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가능성 차단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실시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분리수거 해주세요** 광주시내 일부 원룸 등 다주택 단지에서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채 무단 투기 하고 있어 구청에서 분리수거 안내문을 내붙이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 남구, 부구청장 임명… 시 “신뢰 깨졌다”

**남구 “행정 공백, 불가피한 조치”**
**시 “신뢰의 문제… 양측 교류 중단”**

인사 문제로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웠던 남구가 끝내 3급 자체 승진 인사를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면서 양 측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광주시의 협의하겠다”는 입장에서 갑작스런 선회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남구는 이현 전 자치행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후 ‘발령 대기’ 상태였던 이 전 국장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부구청장 업무 수행에 들어간다. 남구가 이 전 국장에 대한 3급 승진을 의결한 지 14일 만이다.

앞서 남구는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광주시 소속 국장급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이 전 국장을 자체 승진·부구청장으로 내정하면서 광주시와 인사 갈등을 빚어왔다. 남구는 광주시가 인사교류 중단과 함께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을 예고하자, 일단 부구청장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광주시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구는 일주일간 지속된 행정 공백에 어쩔 수 없이 임명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시와 인사교류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6일 전 부구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행정 공백이 이어졌다. 연초에 관내 각종 행사 및 행정 일정들이 밀려있는데 더 이상 부구청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남구는 그러면서도 “광주시와 인사 교류에 대한 소통은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인해 남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에 향후 소통을 일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정기인사 기간인 7월1일에 맞춰 자치구와 인사교류를 하자고 했으나 남구는 ‘부구청장 자리가 공석에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지난달 17일까지 남구에선 자체 승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었지만, 남구는 협약을 어기고 18일 이 전 국장을 자체 승진시켰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약 내용상 자치구의 자체 승진은 위반사항이 아니나, ‘인사교류’라는 협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며 강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에 광주시는 남구 7급·9급 공채채용 대행 중단, 실무 수습비 지원 중단 등 남구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6급 장기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를 제외했다.

남구 공무원노조는 “광주시가 상급 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치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광주시가 예고했던 패널티들을 부과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기정 시장에 항의 면담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인사교류 협약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상지·강주비 기자

# 광주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한 달 연장

장기간 벌였던 집중 단속 기간에도 음주 운전이 줄지 않자 경찰이 고강도 단속을 1개월 연장했다.

1일 광주경찰·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부터 7주간 벌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다음달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최근 3년간 해마다 1~2월을 기점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추이를 고려한 조치다.

광주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교통경찰·암행순찰대·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유흥가·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낮과 밤, 심야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이동식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승용차를 비롯해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키로 했다. 출근길 숙취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적극 대응하고자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양가람 기자